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 2020~2024 -

2020. 1. 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목적	1
II. 추진경과	2
III. 지난 10여년의 실적과 한계	3
IV.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해외 동향	6
V. 비전과 핵심전략	8
VI. 추진과제	10
VII. 추진체계 및 일정	44
[붙임] (旣)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업무계획 분석	52

I.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난 10여년간의 중장기 추진업무*의 성과와 한계, 제도개선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가·보완하여 지속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 개발
 -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06년), 선진화전략('09년), 중장기업무계획('13년)
- '17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서 제안한 혁신과제*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여 국가기록관리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 * (공공기록관리) 5대분야, 24개 혁신과제, 58개 세부과제
 -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 4대분야, 9개 혁신과제, 13개 세부과제
 - 생산·이관·수집, 등록·재분류·지정, 보존·복원·시스템, 서비스·전시·교육
- 신기술·업무 출현의 가속화, 공공부문 업무전반의 자동화 및 지능형 플랫폼 확산 등 전자기록의 생산·관리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 국가기록관리 비전* 및 미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현용·준현용·비현용 단계별 정책과제 마련
 - *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국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목적

- '05년 혁신로드맵, '17년 혁신추진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의 일상적 추진 도모
- 향후 5년간 국가기록관리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 행정 및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기록물 생산기관·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

II. 추진경과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19.2.27.)**
 - 중장기 발전 전략 작성 방안 및 추진일정 수립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원내 13명, 원외 25명(중앙행정기관 6, 지자체 6, 교육청 7, 공공기관 6) 구성(3.8.)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1차 간담회(3.20.)
 - 기획단 구성 취지,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 소개,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워크숍(4.11.~4.12.)
 - 비전·미션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비전·미션 제안, 운영방안 논의 등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간담회(2차~6차)
 -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안) 검토, 국가기록관리 현황 분석, 중장기 발전전략 기본방향 및 목표 토의, 생산단계·기관 기록관리단계·아카이브단계로 구분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의견수렴 등
- **「2019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시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 선포(6.7.)**
 - 비전 :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 미션 : 1.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로 열린정부 구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 확립
3.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마련**
 -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안)’ 발표·토의(11.2.)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안) 원내·외 의견수렴(11월~12월)
 - 7차 기획단 회의,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마련(12.30.)

Ⅲ. 지난 10여년의 실적과 한계

1 주요 실적

□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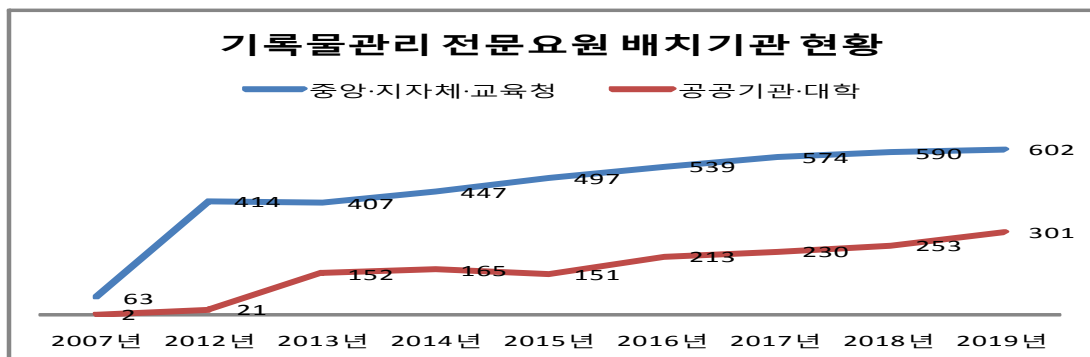
- '05년 혁신로드맵 추진과 더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2007),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17년)의 혁신과제 제도화 및 조직 정비 추진
 - 공공기록물법 개정(폐기중지제도 도입, 기록관 역할·기능 강화, 기록의 날 제정 등), 동법 시행령 개정(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기록관 설치기준 등)
 -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조직개편('19.1.) 실행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 행정기관(751개*)·정부산하 공공기관(189개)·대학(47개)등 기록관 설치 확대
 - * 중앙부처(48) 및 소속기관(135), 대통령 관련(3), 군기관(127),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8), 교육청(광역17, 지역176)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기록보존소 설치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공감대 형성 및 선도적 설치
 - 경남('18.5.), 서울('19.5.) 지방기록원 설치 및 운영
 - 8개 시·도(부산, 대구, 경기 등) 지방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 4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제주) '20년 연구용역 예정

□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요원 배치 증대

-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요원 자격취득자** 증대
 - * (대학원) '07년 17개→'19년 25개 / ** (자격취득자) '07년 389명→'19년 2,383명
- 전문적 기록관리 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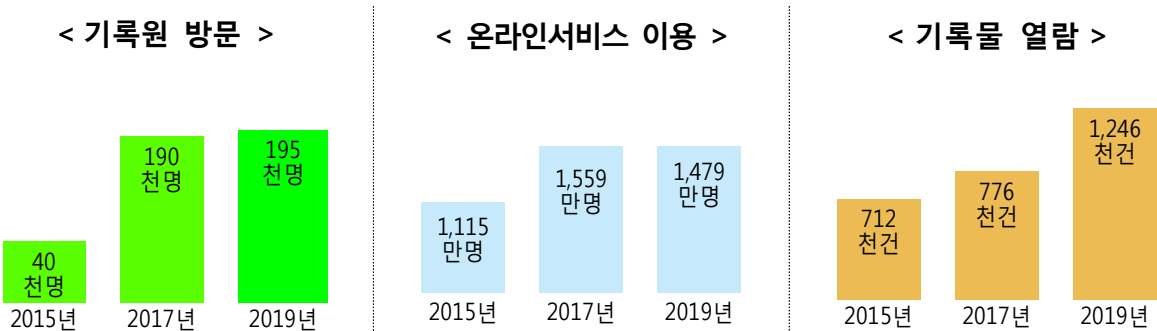


□ 기록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등 양적 성장

- 전자기록물 생산 증가* 및 본격 이관**
 - * '15년(60,119만여건), '16년(63,664만여건), '17년(64,591만여건), '18년(63,648만여건)
 - ** '15년(238만여건), '16년(282만여건), '17년(320만여건), '18년(294만여건), '19년(320만여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증가
 - (기록원) '07년 155만권(문서), 178만점(시청각)→'19년 421만권(문서), 546만점(시청각)
 - (국회) 비전자 16만권, 전자 213만건 / (법원) 비전자 19만권, 전자 859건
- 국가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확충
 - 나라기록관(2008), 역사기록관(리모델링, 2010), 대전기록관(2013), 대통령기록관(2015)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전환
 - 중앙부처·군기관·지자체·교육청 100% RMS 도입, 중앙부처 CRMS 전환

□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및 서비스의 양적 확대

-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 서울(기억의 힘)·경남(기억, 기록을 만나다)기록원, 국회(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록원(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기획전 수시 개최
 -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문화탐방, 기록사랑마을, 시민 기록문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 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열람('07년 511,892건→'19년 1,246,040건), 원문서비스('14년 569만건→'18년 2,027만건)



□ 기록관리 학회·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 성장·발전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설립
- 전국기록인대회(11회), 아키비스트 캠프(7회) 등 개최

□ 민간영역 기록관리 인식 확대 및 분야별 아카이브 설립

- '시민 아키비스트 아카데미', '생활문화 기록학교', '우리동네 기록학교' 등 운영
-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국악·미술 등 예술아카이브, 인권아카이브 등 설립

- **중장기 발전계획의 단절성·일회성 추진**
 - '05년 혁신 로드맵 이후 기록관리 혁신의 단절과 재추진이 반복되어 지속적·체계적 추진 및 성과 창출 어려움
 - ※ [붙임] (既)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업무계획 분석
 - '17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서 제시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였으나 중장기적 로드맵 미흡
- **공공업무의 기록화 지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 미흡**
 - 각급기관의 주요 업무기능과 관련된 기록 생산이 여전히 미흡하고, 업무 수행 과정의 기록화 확인 및 통제 수단 부재
 - '07년 정부기능분류체계 기반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 통합 이후 업무분류체계 통제권 상실 등 내실있는 운영 미비
- **기록물관리기관 균등발전·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모호, 상호 협력 체계 부재
 - '07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 서울·경남만 설치
 - 관할 조직 기록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기록관의 기능·역할 부재
 - 기관별 1개의 단일 유형 기록관, 1인 기록관 체제로 기록관 기능 획일화 및 자율성 제한
 -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의 경우 조직·인력 등의 인프라 취약
-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부족 및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운영**
 - 기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중심의 기록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한정, 민간아카이브 등 타 기관과 연계 부족
 - 서비스의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운영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미흡

IV. 기록관리 환경 변화 및 해외 동향

1

환경 변화

□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요구 증대

- 정부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언론, 시민단체의 기록관리 관심 지속 증가
- 시민, 지역사회 등 국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가 하나의 정보자원·문화적 가치로 인식
- 개인증빙기록 위주의 기록서비스에서 국가 주요 정책, 역사성 또는 사회적 현안 관련 기록정보서비스 요구 지속 증대

□ 국가기록관리 혁신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국가기록원 중심의 일방적 혁신을 극복,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 추진의 공감대 형성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체성 확립, 기록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단발성·일회성 혁신 추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 혁신 추진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기록공동체와의 협력 확대 및 민간아카이브 활성화

-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적 확대 및 공동체 형성, 교류·협력 확대
- 지역민·시민단체·학계 등의 자생적 민간아카이브 활성화
-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중심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위한 방향 모색

□ 전자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관련 법의 제·개정

- 신기술·업무 등장의 가속화, 공공부문 업무전반의 자동화 및 지능형 플랫폼 확산 등으로 공공부문의 업무환경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 ※ 정부 업무에 ICBM*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의 도입·활용 가속화
 -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전자문서법 등 전자기록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 확대
 -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2

해외 동향, 시사점

□ 해외동향

구분	정책목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2018-2022 전략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에의 접근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비율 82%까지 확대, 5억 쪽 디지털화, 디지털 차세대 검색 도구 지원이 가능한 비율을 95%까지 확대 고객과의 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요청 처리 비율을 93%로 높임, 만족도 90%까지 확대 등 - 연방기관의 전자기록관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 마련 NARA의 존재가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부기관 10%를 선정해 기록관리 실태 조사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의 건설
영국 국가기록원 (2015-2019 전략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를 감시함으로써 정부의 기록을 남기고 보존되게 할 것 기록컬렉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대중에게 영감을 줄 것 아카이브즈 부문에서 효과적인 리더이자 파트너가 될 것 학계와 모범적으로 연계,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식을 발전시킬 것 계획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될 것
호주 국립기록원 (2017·18년- 2020·21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공식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있고 사용 가능한 진본성 있는 연방기록의 생산, 관리 및 보존 촉진 - 국내외 아카이브즈 공동체에 대한 호주의 참여 지속 및 강화 국가의 영구보존 기록 컬렉션과 정부, 연구자, 국민을 가치 있게 상호 연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영구보존 기록 컬렉션 및 그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 증진 - 소장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 시사점

-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록의 생산·관리·보존 등 기본 업무 충실
- 소장기록물의 온라인서비스 및 열람 강화 등 접근 확대
- 급변하는 IT환경 등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즈 구축
- 유관단체, 학계, 관련 기관 종사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 강화
- 기록관리 종사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V. 비전과 핵심전략

비전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미션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로 열린정부 구현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 확립
-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보존 → 서비스) 기록물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공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선도
- (기록원 주도 → 각급 기관) 국가기록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아닌,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 추진
- (정부 중심 → 민간·학계·산업계)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아카이브·학술단체·산업계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제시 → 실행 강화) 선언적 정책에서 벗어나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및 일상적 혁신 추진으로 성과 창출

1

추진 방향

< As i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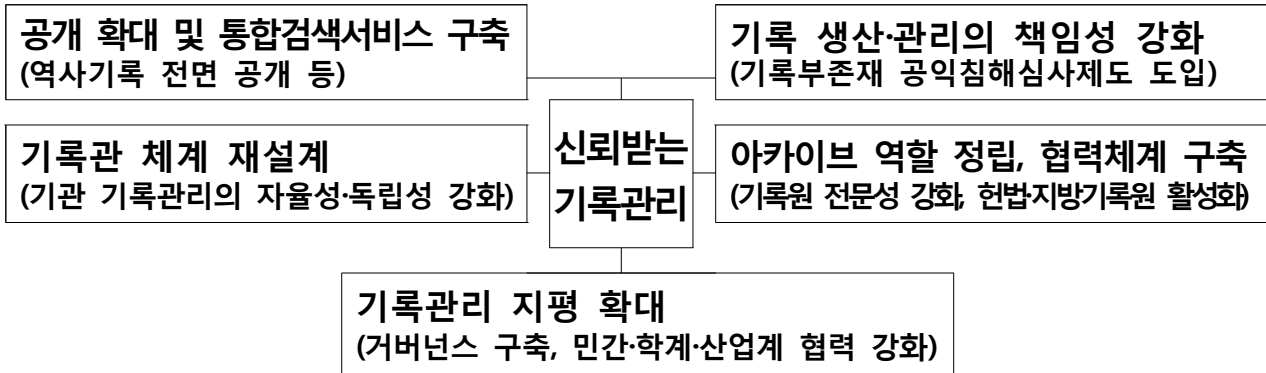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기록화	생산의무부여, 규제 중심
기록관	단일유형 기록관리 자율성 미흡
아카이브	기록원 중심, 기관별 고립성
거버넌스	공공영역 중심의 기록관리체계

< To be >

이용자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기관 책임하 기록화 대상 명확화
기록관 유형 다양화, 자율성 확대
상호간 협력을 통한 균형 발전
민간·학계·산업계로 교류·협력 확대

2

추진 목표



3

5대 전략 22개 추진과제

1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② 기록정보 통합검색 및 접근 확대 기반 구축 ③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④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2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록화 대상 명확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② 기록분류·평가체계 정비 및 재설계 ③ 기록유형별 체계적 생산·관리 절차 재정립 ④ 기록물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⑤ 처리과 기록관리 기능 및 책임 강화
3	기록관 역할 강화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혁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록관 권한 및 역할 확대 ②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③ 기록관의 인프라 구축 ④ 기록관리 상시 모니터링 기능 정립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체성 확립 및 균형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정립 및 독립성 강화 ②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관리체계 확립 ③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④ 업무지식 자원화를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현
5	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강화 및 역할 재정립 ③ 국가기록관리체계 재정립 및 기반 확대 ④ 기록관리 인력의 전문성·윤리성 강화 ⑤ 민간·학계·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VI. 추진과제

1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

- ◇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및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검색·접근확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편익 증대
- ◇ 이용자 중심의 검색·열람 서비스 및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 추진 과제 》

1-1.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① 기록물관리기관별 서비스정책 수립 및 서비스모델 개발
- ②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및 시행
-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도 정비

1-2. 기록정보의 통합검색 및 접근 확대 기반 구축

- ①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및 운영
- ② 기록물 원문서비스 지속적 확대

1-3.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① 기획재분류를 통한 시의성 있는 기록 공개
- ② 연구·학술 등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강화
- ③ 다양한 기록콘텐츠 개발·서비스 확대
- ④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아카이브 개방

1-4.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 ① 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 ② 범국가적 기록연대·공유의 장 마련
- ③ 국내외 관련기관과 기록문화 확산 협력사업 추진

1-1-1. 기록물관리기관별 서비스정책 수립 및 서비스모델 개발 ㉠

□ 현황 및 필요성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정책에서 벗어나 기록물관리기관 이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서비스정책 수립

□ 추진내용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정책 수립
 - ※ 검색, 열람, 전시, 편찬, 콘텐츠 등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
-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및 대국민 서비스모델 개발

1-1-2.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및 시행 ㉡

□ 현황 및 필요성

- '06.10. 공공기록물법 개정시('07.4.5. 시행) 대통령령으로 비공개기록물의 유형별 비공개 상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 *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 지금까지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에 제한이 되고 있음

□ 추진내용

- 기록물 유형*에 따른 비공개 상한기간 제도화 및 운영절차 마련·시행
 - * 국가안보, 국방·통일, 외교관계, 개인정보 등

1-1-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도 정비 ㉢

□ 현황 및 필요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보호 필요성 여부 검토 없이 **공개**여부는 현용기록 중심의 정보공개법 적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의 적극적 공개를 위해 별도의 제도 도입 필요

□ 추진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기록물 중 일정기간 경과 기록물의 공개절차는 「정보공개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규 마련 등

※ 공공기록물법에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공개 기준, 열람 및 제공 절차 규정 등

1-2 기록정보의 통합검색 및 접근 확대 기반 구축

1-2-1.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및 운영 ㉠㉡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기록물은 생산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원하는 기록물의 소재 파악 및 활용 어려움
- 통합검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공공기록의 검색·활용 지원 필요
- 소장 기록물 검색·활용에 최신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내부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지능형 기록서비스 확대 필요

□ 추진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한 범정부 기록물 통합검색 및 소재정보 제공
 - ※ 중앙부처 CRMS(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
- 소장 기록물 검색의 자동화·지능화 추진
 - ※ OCR(광학문자인식기술) 강화, 기록정보 심층 분석, 이용행태 기반 맞춤형서비스 등 포함

1-2-2. 기록물 원문서비스 지속적 확대 ㉢

□ 현황 및 필요성

- 권리구제, 증빙용 위주의 원문서비스에서 탈피,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성격의 기록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확대 필요

□ 추진내용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디지털화 지속 추진
- 전자기록 원문서비스 시행
- 아카이브 기록을 학계·문화계·산업계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저작권 검토)

1-3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1-3-1. 기획재분류를 통한 시의성 있는 기록 공개 ㉠

- 현황 및 필요성
 - 법령에 따른 주기적 재분류, 청구에 의한 공개 등 관행적 서비스
 -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성·시의성 있는 기록정보에 대한 재분류 및 공개 필요
- 추진내용
 - 시의성 있는 정책·사건 관련 기록물은 재분류 시기와 상관없이 조기에 공개여부 검토 및 서비스
 - ※ 특정시점이 지난 역사기록의 전면 공개 포함

1-3-2. 연구·학술 등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민원처리 중심의 열람서비스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곤란
 - 기록정보 수요자가 원하는 열람서비스 기반 조성 필요
- 추진내용
 - 연구·학술 분야에 대한 열람서비스 확대
 - 기록정보 열람 특화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 * 개인증빙기록열람센터, 학술열람전문센터, 공공기관지원센터 등
 - (대통령기록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체계 개선, 대통령학 연구센터 추진 및 운영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1-3-3. 다양한 기록콘텐츠 개발·서비스 확대 ㉠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의 주요 정책, 시의성이 있거나 시대·생활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록콘텐츠 제공
- 역사성 또는 사회적 현안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정보의 발굴 및 제공 필요

□ 추진내용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전시, 편찬, 온라인 콘텐츠 연구·개발
 - ※ 일제 강제동원 명부 관련 통합 DB 설계 및 구축 등
-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주요 기록의 발굴·제공

1-3-4.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아카이브 개방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정보의 교육적·문화적·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카이브의 역할 정립 및 시·공간적 개방 필요

□ 추진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 전시관 주말 운영, 열람실 운영시간 확대, 회의실 등 공용공간 개방 등

1-4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1-4-1. 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영기**

현황 및 필요성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록문화 확산사업 필요

추진내용

- 체험·견학·전시·강좌 등 국민참여형 기록문화 확산모델 개발 및 운영
※ 대통령기록문화 지평확대 포함

1-4-2. 범국가적 기록연대·공유의 장 마련 **영기민간협력사업**

현황 및 필요성

- ‘기록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기념하여, 그간 ‘기록인’ 중심으로 개최되던 행사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 필요

추진내용

- ‘기록의 날’ 위상 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축제의 장 마련

1-4-3. 국내외 관련기관과 기록문화 확산 협력사업 추진 **영**

현황 및 필요성

- 아카이브 주도의 기록문화 확산사업에서 각급기관, 유관단체, 민간 등에 이르기까지 기록문화 저변 확대 필요

추진내용

- 세계기록유산 보유기관 및 민간아카이브 등과의 협력 추진
- 유관기관(역사관련 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기록문화 확산 추진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 ◇ 기관 책임 하에 모든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하도록 제도화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및 정부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 변화하는 정부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관리 절차 확립

《 추진 과제 》

2-1. 기록화 대상 명확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 ①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 ② 기록의 정의 및 각급 기관별 기록화 대상 명확화
- ③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도입 및 운영
- ④ 누락없는 기록화를 위한 제도 정비

2-2. 기록분류·평가체계 정비 및 재설계

- ①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도입 검토
- ②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③ 보존기간 구분기준 및 보존기간 준칙·운영체계 마련

2-3. 기록유형별 체계적 생산·관리 절차 재정립

- 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확립 및 단계적 확산
- ② 웹기록·SNS 등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
- ③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등 특수유형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
- ④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2-4. 기록물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 ①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 ②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생산-RM 기록물 이관기능 재설계
- ③ 생산·활용을 고려한 기록유형별 메타데이터 재설계

2-5. 처리과 기록관리 기능 및 책임 강화

- ① 처리과 기록관리책임자 조정 및 제도화
- ② 기록물 정리 절차 및 방식 재정립
- ③ 관리자·신규자 등 기록관리 교육과정 확대·강화

2-1

기록화 대상 명확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2-1-1.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현황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의 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 침해 사례 다수 발생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의무 및 책임성 강화 필요

추진내용

- 공공기관의 기록 생산 의무와 책임 범위 검토 및 규정 마련
- 기록부존재 공익침해 감사제도 또는 심사 절차, 감사 또는 심의 결과 이행 절차 등 제도설계 및 법제화

2-1-2. 기록의 정의 및 각급 기관별 기록화 대상 명확화

현황 및 필요성

- 인식 부족 또는 고의로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미등록하는 사례 다수 발생
- 공공기관 책임 하에 업무 수행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 필요

추진내용

- 기록의 개념, 성립 기준, 범위 정립
- 기록물 등록·관리 대상 기준 마련
- 기관 고유업무, 법적의무 이행기록 등 기관별 기록화 대상 선정
- 생산의무기록(회의록·속기록) 등록·관리 강화

2-1-3.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및 필요성

-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 마련 필요
- *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 3(기록물의 폐기금지)

추진내용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폐기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적용

※ 폐기금지 대상, 결정 및 해제절차, 각급기관 이행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등

2-1-4. 누락없는 기록화를 위한 제도 정비 ㉔

□ 현황 및 필요성

- 비전자문서, 혼합문서(전자 본문+비전자 첨부)의 빈번한 등록 누락
- 문서 중심의 파일링 단위(철·건)로 다양한 유형의 전자 기록 관리 곤란

□ 추진내용

- 전자화문서 진본성 인정 방안 등 비전자문서, 혼합문서 등록·관리 방안 마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 시청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파일링 단위 재설계

2-2 기록분류·평가체계 정비 및 재설계

2-2-1.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도입 검토 ㉔

□ 현황 및 필요성

- 업무분류 목적의 기능분류체계(BRM)와 기록분류체계의 일원화로, 기록물 분류·관리·이관에 다양한 문제점 발생
- 기록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록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 검토 필요

□ 추진내용

- 기록관리 구조 및 속성을 반영한 기록물 고유의 분류체계 재설계 검토
 - ※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평가 체계 개선 포함
- 기록물 보유기간 개념 도입 등 보존기간 구분방식 재검토

2-2-2.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 현황 및 필요성

- 단위과제 신설·변경시, 기능유형이나 업무내용 등의 검토 없이 기능 분류체계(BRM) 관리자의 형식적 승인으로 부적절한 단위과제 생성

□ 추진내용

- 기관별 단위과제 관리 정보 정비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절차 개선
 - ※ 단위과제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기록관의 상시 모니터링 등 권한 확보

2-2-3. 보존기간 구분기준 및 보존기간 준칙·운영체계 마련 **㉡**

□ 현황 및 필요성

- 기관 특성 및 기록유형을 고려한 7종의 보존기간 변화 필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③항 및 제26조(보존기간) ②항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 기관 공통·처리과 공통 및 각급 분야에 대한 보존기간 책정 기준 수립을 통한 일관된 기록물 보존기간 확정 도모

□ 추진내용

- 보존기간 7종(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의 유연화
 - ※ 보존기간을 한시와 영구로 크게 구분,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1년~30년, 사업종료까지 등)은 기관에서 기록유형별로 선택
-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준칙 운영지침 마련
 - ※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책임 및 역할, 준칙 작성 절차, 부록 등
- 운영 지침에 의한 기관·기록유형별, 주제별 「보존기간 준칙」 개발
 - ※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마련 포함

2-3

기록유형별 체계적 생산·관리 절차 재정립

2-3-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확립 및 단계적 확산 **국** **국**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기록관리 절차는 기록유형에 관계없이 표준전자문서 중심의 3단계(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프로세스를 획일적으로 적용
- 표준전자문서 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 이관·보존·활용에 기술적·관리적 한계 노출

□ 추진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원칙, 기준 및 관리절차 마련·시행
-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이관·보존 방안 마련 및 적용

2-3-2. 웹기록·SNS 등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 **국** **국**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기록관리 절차는 기록유형에 관계없이 표준전자문서 중심의 3단계(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프로세스를 획일적으로 적용
- 표준전자문서 외 웹기록, SNS 등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 이관·보존·활용에 기술적·관리적 한계 노출

□ 추진내용

- 웹기록 등 비정형 전자기록의 기록관리 원칙, 기준 및 관리절차 마련
- 웹기록, 소셜미디어 등의 수집·보존체계 마련 및 시행

2-3-3.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등 특수유형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 **국** **국**

□ 현황 및 필요성

- 아날로그→디지털 기록 생산 환경 변화에 따른 시청각기록 대량 생산과 그에 맞는 세부 지침 부재
-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정부간행물 수집·관리체계 개선 필요

추진주체 : **국**(각급기관), **국**(기록관), **국**(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국**(헌법기록물관리기관), **국**(지방기록물관리기관)
추진주체 : **국**(각급기관), **국**(기록관), **국**(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국**(헌법기록물관리기관), **국**(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관별 상이한 행정박물 관리에서 일원화된 관리 서식 및 관리대상 선별 기준을 제시하여 각급 기록관 행정박물 관리 효율성 증대

□ 추진내용

- 특수유형기록물의 관리범위 명확화 및 생산·관리·이관체계 확립
※ 대통령선물·행정박물 포함
-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연계한 통합관리 체계 마련(단위과제 연계 등)

2-3-4.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㉔

□ 현황 및 필요성

- 비밀기록물의 이관시기 도래 여부 사전과약 곤란, 보안상의 이유로 기록관의 비밀관리 권한 제한

□ 추진내용

-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 관리 강화

2-4 기록물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2-4-1.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㉔㉕(행정안전부)

□ 현황 및 필요성

- 클라우드·모바일 등 달라지는 업무 환경에 맞춰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현행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개선

2-4-2.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생산-RM 기록물 이관기능 재설계 ㉔

□ 현황 및 필요성

- 시스템간 전자기록 이관(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 시스템)에 따른 비용 증가

추진주체 : ㉔(각급기관), ㉕(기록관), ㉖(영구기록물관리기관), ㉗(국가기록원), ㉘(헌법기록물관리기관), ㉙(지방기록물관리기관)

-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따라 전자기록 이관 및 보존 절차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시스템 자원통합 및 논리적 이관을 위한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2-4-3. 생산·활용을 고려한 기록유형별 메타데이터 재설계 ㉠

- 현황 및 필요성
 -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에 적용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보완 필요
- 추진내용
 - 기록유형별·프로세스별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적용
 - ※ 유형을 포괄하는 공통 메타데이터, 유형별 필수·선택 메타데이터 등

2-5. 처리과 기록관리 기능 및 책임 강화

2-5-1. 처리과 기록관리책임자 조정 및 제도화 ㉠

- 현황 및 필요성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형식적 지정 및 잦은 교체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 곤란
- 추진내용
 - 처리과 장의 책임·역할 부여, 기록관리책임자 및 생산자의 역할 명확화
 - ※ 시행규칙의 기록물관리책임자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2-5-2. 기록물 정리 절차 및 방식 재정립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물 정리 기간의 형식적 운영으로 오분류·오편철 발생, 비전자 편철·정리 미시행
- 추진내용
 - 기록물 정리기간 실질적 운영* 및 정리결과에 대한 처리과 책임 부여
 - * 미등록, 오편철 또는 공개값 오류 수정 등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2-5-3. 관리자·신규자 등 기록관리 교육과정 확대·강화 [각기국]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 생산 및 등록에 대한 생산자·처리과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록관리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확대 필요

□ 추진내용

- 교육의 시·공간 제약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기록관리 교육 이수 법적 의무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각급기관의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기록관리 과정 편성 강화

- ◇ 기록관의 권한 확대, 기능·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관 기록관리의 책임성 담보 및 자율성 보장
- ◇ 기록물 장기보존 등 기록관의 기능 확장에 따라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력 및 시설·시스템 등 인프라 확장을 통해 기록관리 수준 제고

《 추진 과제 》

3-1. 기록관 권한 및 역할 확대

- ① 기록관리 정책 수립·시행
- ② 기록관 역할 재정립 및 시행

3-2.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 ①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활용 강화
- ② 기록물 관리·보존 및 이관 프로세스 정립
- ③ 기록물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개선

3-3. 기록관의 인프라 구축

- ① 기록관리 인적 기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 ②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확충
- ③ 기록관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3-4. 기록관리 상시 모니터링 기능 정립

- ①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통한 기록관리 수준 제고
- ② 기록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강화
- ③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체계 확립

3-1 기록관의 권한 및 역할 확대

3-1-1. 기록관리 정책 수립·시행 ☐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기관별로 기록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은 획일화, 자율성 제한
 - 자율적 기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정책 수립·시행 필요
- 추진내용
 - 기관 유형과 생산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기록관리 정책 수립·시행
 -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포함
 - 기관별 기록관리 여건과 기록 이용자를 고려하여 기록관리 전략 및 정책 마련

3-1-2. 기록관 역할 재정립 및 시행 ☐☐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이관, 기관 평가 등 획일적인 업무 수행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이 낮고,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전문적 업무 수행 곤란
 - 기록관이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정립 필요
- 추진내용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담기구로 역할과 기능 부여
 -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기록 생산·등록, 관리 절차 마련
 - 기록의 평가·분류, 공개 재분류, 정보 서비스 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
 - 기록 생산 통제, 기록관리 실태 점검 등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권한 부여

○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 기구별 역할 재정립

- * 처리과-기록관-대통령기록관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대통령기록관리 생산단계 안정화 추진

3-2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3-2-1.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활용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물 유형(7종)별 생산 통계 및 목록을 별도 조사 후 엑셀파일에 수기 작성하여, 생산현황통보시스템(SORA)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
- 데이터 누락·오류·미제출 등으로 인한 통보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 및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활용도 저하

□ 추진내용

- 생산현황 관리방식 개선(통보대상·방식, 대국민 공개 등)
- 생산현황 분석 및 활용 강화(기록관에서의 활용도 제고)

3-2-2. 기록물 관리·보존 및 이관 프로세스 정립 ㉢㉣

□ 현황 및 필요성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에 따른 장기 보존 기능 일부 부여 등 업무 범위 확대
-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 장기 보존에 따른 관리 절차 마련 및 이관의 실효성 확보

□ 추진내용

- 동종대량(비치 등) 기록물 장기보존에 따른 관리·이관체계 마련
-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관리 및 이관절차 재정립
- 대통령기록물 이관체계 마련 및 이관연장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3. 기록물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개선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의 이관시점·5년주기 공개재분류의 효율적 수행 및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및 이관연장으로 특수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 절차 필요

□ 추진내용

- 기록관 단위 공개재분류 실효성 검토 및 제도 정비
- 기록관 보유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 절차 수립

3-3 기록관의 인프라 구축

3-3-1. 기록관리 인적 기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 배치가 대부분으로,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부담 과다
 - ※ 정부산하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사립대학은 전문요원 배치 저조

□ 추진내용

- 기관유형별 인력 배치 구성모델 마련
 -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배치 기준 마련
 - 기관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 운영 원칙 마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범위 정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속적 확대
 -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 등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확대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규직화, 단계적 증원 추진

3-3-2.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확충 ㉠

- 현황 및 필요성
 - 동종대량·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장기 보존에 따른 기록관 보존 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적 확충 필요
- 추진내용
 - 동종대량, 비치기록물 등 장기보존 기록물 규모를 고려한 보존시설 확보

3-3-3. 기록관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 현황 및 필요성
 - '06년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새로운 기록환경 반영의 한계로 인해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포맷 변환 과정 등에서 문제점 노정
 - 새로운 기록관 유형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대학 등 아카이브 기능 보유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필요
- 추진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 강화
 - * 지자체·교육청 기록관리시스템 포함
 - 공공기관용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방안 마련(아카이브 기능 포함)
 - CRMS 확산 및 운영 지원

3-4 기록관리 상시 모니터링 기능 정립

3-4-1.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통한 기록관리 수준 제고 ㉠㉡

- 현황 및 필요성
 - 각급 기관의 평가제도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공정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기록관리 발전방안 조성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법령 중심의 망라적·획일적 평가에서 기관별 여건 및 이행단계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기관유형별·수준별 평가, 지표 개발 등 평가제도 지속적 개선

3-4-2. 기록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점검 방식 개선 필요
- 기록관에 대한 지도·점검의 방식이 아니라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대상·내용·방식 등 개선을 통해 실태점검 및 컨설팅 실효성 제고

3-4-3.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체계 확립 **㉠**

□ 현황 및 필요성

- 기관유형, 기능을 고려한 전담부서·인력 운영, 기록관리 현장을 반영한 기록관 수준별 맞춤형컨설팅 실시 등 지원체계 확립 필요

□ 추진내용

- 기관 유형 및 수준별 기록관리체계 구축 지원
 -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맞춤형 기록물관리 지원·점검 체계 구축 포함

- ◇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역할·기능 정립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중요 기록물 수집·보존체계 확립 및 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

4-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정립 및 독립성 강화

-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 ②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 재정립
- ③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업무 기능 강화
- ④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운영 안정화

4-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관리체계 확립

- ① 기록물 수집정책 재정립
- ②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 ③ 다양한 유형의 기록 통합 이관 및 관리체계 마련

4-3.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 ① 기록물 안정적 보존기반 구축
- ②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확립

4-4. 업무지식 자원화를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현

- ①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
- ②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
- ③ 지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정립 및 독립성 강화

4-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역할과 보존 분담에 기초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별 정책 수립·시행 필요

□ 추진내용

- 국가·헌법·지방행정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카이브의 기본 업무(수집·보존·활용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 기관 운영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기관 유형별 특화된 기록관리 역할과 기능 등 포함

4-1-2.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 재정립 **㉡**

□ 현황 및 필요성

- 대통령기록물, 중앙부처 등 국가 중요기록물 관리 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기능 재조정 필요

□ 추진내용

- 중앙부처 등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보존·서비스 기능 강화
- 대통령기록물 수집·보존·서비스 기능 강화

※ 대통령지정기록물 생산·관리 체계 개선 및 보호 강화 포함

4-1-3.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업무 기능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입법·사법·선거기록의 관리 기관으로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완결적인 기록관리체계 구축

- 민주적 권력 분립에 따른 자율성을 기반하면서, 동시에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업무기능 수행으로 국가기록관리의 균형과 분담 체계 정립

□ 추진내용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능·역할 정립
- 입법기록, 사법기록, 선거기록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구축

4-1-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운영 안정화 ㉠㉡

□ 현황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활동과 시민·주민들의 삶, 지역사회의 기억을 기록화하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역할 정립 필요
- 지방 기록관리 업무의 성격, 시·군·구 및 교육청 등과의 기록물 이관 문제, 관할 공공기관의 범위 등 운영에서 노정된 문제 해결 필요

□ 추진내용

- 지방의 자율적 기록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정비
- 지방기록문화의 거점으로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 ※ 민간 영역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면모에 대한 기록화 시행
- 기록관리 사무 성격 정립 및 관련 법령 정비(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
- 지방기록원과 시·군·구 및 교육청 관계 정립(기록물 이관체계 등)
- 관할 공공기관 범위(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재확정

4-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관리체계 확립

4-2-1. 기록물 수집정책 재정립 ㉢

□ 현황 및 필요성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국가 중요기록물의 효율적 수집·관리를 위해 수집대상·이관시기 등 수집정책 재정립 필요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관련 기능 정립 필요
 -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수집

□ 추진내용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 수집대상 및 이관시기 등 수집정책 재정립 및 적용
- 기록물 가치평가를 통해 주요 기록물 선별·수집
- 민간·해외기록물 수집·관리 기능 강화 및 활용체계 마련

4-2-2.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전자·비전자·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리·기술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 필요
- 생산기관(출처) 중심 계층기술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정보 서비스 다양화 방안 마련

□ 추진내용

- 소장기록물 분류체계 수립 및 시범적용
- 정리·기술 체계 개선 및 업무 강화
-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 및 활용 강화
-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분석 및 연구체계 마련

4-2-3. 다양한 유형의 기록 통합 이관 및 정리체계 마련 ㉡

□ 현황 및 필요성

- 전자·비전자 기록물의 통합 이관 및 정리체계 확립 시급
- 업무·기록분류체계와 연계를 통한 특수유형 기록물 이관프로세스 확립 필요

□ 추진내용

- 전자·비전자 통합 이관 및 정리체계 확립
- 분류체계 기반의 시청각·간행물·행정박물 이관 및 정리체계 확립
- (대통령기록관) 19대 대통령기록물 차질없는 이관 추진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3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4-3-1. 기록물 안정적 보존기반 구축 ㉠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시행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대폭 증가

- '07년 155만권(문서), 178만점(시청각) → '19년 421만권(문서), 546만점(시청각)

□ 추진내용

-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화 및 중요기록물 복원·복제 추진
- 기록물 매체수록체계 정비 및 시행
 - ※ 기록물 매체수록 추진방향 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
- 기록물 체계적 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 ※ 기록물 보존인프라 강화 및 보존시설 확충방안 마련

4-3-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확립 ㉡

□ 현황 및 필요성

-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관한 기본 정책 없이 일부 기록 유형 및 정보기술별 절차·기술만 있어 유형별 전자기록의 포괄적인 관리와 보존에 한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기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전자기록 장기보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 강화

□ 추진내용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적용
 - ※ 보존포맷 다양화, 포맷 변환 주체·방식 전환 등 기관 자율성 확대
- 전자기록 기술·표현정보 관리체계 구축
 - ※ 전자기록 포맷,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활용 강화
- 전자기록물 보안 관리 강화 및 복구 기반 마련
 - ※ 전자기록물 재난복구, 보안관리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4

업무지식 자원화를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현

4-4-1.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재설계 및 구축 ㉠

□ 현황 및 필요성

-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화 등 정부 기록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 정부 업무에 ICBM*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의 도입·활용 가속화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 추진내용

- 현행 시스템 및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차세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
- 업무 지능화(자동화 포함) 및 빅데이터 활용의 단계적 추진

4-4-2.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재설계 및 구축 ㉡

□ 현황 및 필요성

- 디지털 환경변화,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 미흡 등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 필요 → 디지털 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용역 추진('19년)

□ 추진내용

-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4-4-3. 지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현황 및 필요성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능·역할 및 보유기록물의 특성을 고려, 업무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지자체별 기록관리 특성을 반영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학계·산업계 전반의 협력 체계 강화
- ◇ 국가기록관리의 총괄·조정 및 기본 정책 수립 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조직적 위상 및 핵심 기능 확대
- ◇ 기관 유형·규모·업무량 등을 고려한 기록관 체계 재설계 및 기록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추진 과제 》

5-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 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 ② 기록물관리기관 네트워크 다각화 및 협력 강화

5-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강화 및 역할 재정립

- ① 국가기록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독립성 확보
- ② 국가기록관리 정책 개발 등 핵심 기능 및 역할 강화
- ③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강화

5-3. 국가기록관리체계 재정립 및 기반 확대

- ① 기록관 조직체계 재정립
- ② 기록관 설치·운영 유형별 표준모델 마련
- ③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체계 구축
- ④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조직체계 구축
- 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추진

5-4. 기록관리 인력의 전문성·윤리성 강화

- ① 기록학 및 유관 학문의 내실화 도모
-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문성 및 직무윤리 강화

5-5. 민간·학계·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 ① 민간 아카이브 지원·협력체계 구축
- ② 기록관리 학술단체 교류·협력 확대
- ③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지원

5-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5-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 현황 및 필요성

- '07년 공공기록물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설립(국무총리 소속)되었으나, 대부분 국가기록원 수행업무 심의* 역할에 그침
- * 기록관리 기본정책, 표준 제개정, 비공개기록물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 국가기록관리 기본 정책 자문과 심의 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

□ 추진내용

-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 등 전문위원회 운영 강화

5-1-2. 기록물관리기관 네트워크 다각화 및 협력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외 기록물관리기관 간 소통·협력을 통한 기록관리 내실화 및 기록관리 전반의 영향력 제고 필요

□ 추진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대통령기록관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대통령기록관, 전직 대통령기념재단 등
- 기록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 민간아카이브 협의체 구성·운영
-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네트워크 강화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5-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강화 및 역할 재정립

5-2-1. 국가기록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독립성 확보 ㉠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기록관리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조직 위상(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 낮아 독립적 의사결정 및 체계적 기록관리 곤란

□ 추진내용

- 조직 위상 강화 및 인사·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 연구직 공무원 대상 「특임연구관」 제도 도입 검토

5-2-2. 국가기록관리 정책 개발 등 핵심 기능 및 역할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관리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 및 정책 수립·운영 기능 부재
- 기록관리 유관기관, 민간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에서 위상·역할 모호

□ 추진내용

- 국가기록관리 주요 정책 개발 및 시행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상시점검을 통한 추진 독려
- 중장기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시행
- 기록물관리기관 협력·지원 강화

5-2-3.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중장기 단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전자기록의 관리 및 장기보존을 지원할 정보기술에 대한 실험, 신규 컴퓨팅 방법과 도구 개발 필요
- 대량·대용량의 전자기록관리 업무 부담 경감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자동화 기술 개발 필요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추진내용

- 전자기록의 안정적 관리와 장기적 보존을 위한 운용 기술의 확인 및 개발
- 대량·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는 기록의 관리품질 향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능화 기술 개발

5-3 국가기록관리체계 재정립 및 기반 확대

5-3-1. 기록관 조직체계 재정립 □

□ 현황 및 필요성

- 기관 유형·규모·업무량 등과 상관없이 획일적 기록관(1개 기관=1개 기록관) 설치
-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자율성 강화 필요

□ 추진내용

- 기관별 기록관 설치방안 수립 및 시행(기록관 설치기준, 단위·규모 등)
※ 기관유형·규모·업무량 등을 고려한 기록관 체계 재설계 및 적용

5-3-2. 기록관 설치·운영 유형별 표준모델 마련 □□

□ 현황 및 필요성

- 각급 기관의 규모, 여건 등과 관계없이 설치의무 대상기관은 1개의 기록관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기록관 운영 어려움 발생
-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록관 유형 다양화 및 시범적용 필요

□ 추진내용

- 기록관 유형별 위상 정립 및 운영모델 개발
※ 통합·복수 등 기관 여건에 따른 기록관 운영 모델 마련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의 독립부서화 및 팀(계) 단위 조직 추진
 - ※ 부처단위·광역 시도·교육청급 기록관 독립부서화 시범 추진
- 본청-소속기관 간 기록관리 체계 정립
 - ※ 기관 유형 및 여건에 따른 계층적·집중적·독립적 체계 마련
- 특수기록관 존치 여부 등 기록관 체계 정비
- 한시·폐지기관 기록관리 체계 정립
 - ※ 한시·폐지기관 기록관 체계 재검토 및 기록관리 절차 정비

5-3-3.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체계 구축 국공공 대학

□ 현황 및 필요성

- 장기보존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필요
- 전체 공공기관 중 일부기관을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하는 방식 검토 필요 * 40개 기관(전체 959개 기관)
- 다양한 기관유형·규모,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지원방안 강구 필요

□ 추진내용

-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제도 정비(법령 제·개정 등)
 - ※ RM과 AM기능 혼재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의 기능 재정립 등
- 직접관리기관 등 정비
-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협력·지원 강화
 - ※ 정부산하 공공기관 유형화를 통한 실질적 지원

5-3-4.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조직체계 구축 헌

□ 현황 및 필요성

- 국회기록보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 수준으로 운영
- 전국적 단위의 헌법기관도 산하 기록관 설치와 전문요원 배치에 소극적

□ 추진내용

- 기관별 규모·업무량을 기준으로 전문인력 배치 및 조직 기준 마련·시행

추진주체 : 국(각급기관), 국(기록관), 국(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국(헌법기록물관리기관), 국(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 설치 단위 기준 마련·시행

5-3-5.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추진 **국지** **지방**(지방자치단체)

□ 현황 및 필요성

- '07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 경남('18.5.), 서울('19.5.)만 설치 및 운영
- 8개 시·도(부산, 대구, 경기 등) 지방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 4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제주) '20년 연구용역 예정

□ 추진내용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다양화
 - ※ 표준 지방기록관리시스템 개발·보급 포함
- 미설치 광역시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 지방기록물 관리정책 전환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5-4 기록관리 인력의 전문성·윤리성 강화

5-4-1. 기록학 및 유관 학문의 내실화 도모 **국** **학계**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경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기록학 내실화 도모
- 공공기록, 기업기록, 영상아카이브, 아트아카이브, 마을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록관리 영역 확대에 따른 유관 학문과 협력 필요

□ 추진내용

- 기록학 및 유관 학문의 학술활동, 학술교류 활성화
- 이론과 실무현장 경험의 선순환을 통한 교육콘텐츠 확충

5-4-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국** **학계**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리법 시행 20년이 경과하고 기록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추진주체 : **국**(각급기관), **국**(기록관), **국**(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국**(헌법기록물관리기관), **국**(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제도와 교육은 정체

※ 기록관리학 대학원(25개) 및 교육원(3개)에서 매년 200여명의 전문요원 자격자 배출
- '19년 8월 기준 현재 전문요원 자격취득자 2,383명(대학원 1,864명/교육원 254명/자격시험 265명)

-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경우 기록관리 교육과정 공통기준 부재, 실습 과정 부족, 전담교수 없이 운영

□ 추진내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과정 점검 및 지원
※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점검 및 제도적 보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제도 정비

5-4-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문성 및 직무윤리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리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 프로그램 미비
 -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 중심으로 생산환경 변화, 전문요원의 역할 변화*
 - * 기록이 이관된 이후의 물리적 통제·관리자에서 생산단계의 통제 및 지도·점검

□ 추진내용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재교육 강화
- 기록관리 강사 양성 및 인증제 도입
- 직무윤리 교육 의무화 및 활성화
※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5-5 민간·학계·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5-5-1. 민간 아카이브 지원·협력체계 구축 ㉠㉡

□ 현황 및 필요성

- 공동체, 예술, 인권 등 다양한 민간아카이브가 자생적으로 설립·운영
- 민간 아카이브 지원 강화로 기록관리 진흥 기반 마련

추진주체 : ㉠(각급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추진내용

- 민간아카이브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정보 공유 기반 제공
- 민간아카이브 내실화를 위한 기록관리 기술·기법 지원

5-5-2. 기록관리 학술단체 교류·협력 확대 [학계] [국]

□ 현황 및 필요성

- 기록관리 관련 학회, 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필요
- 기록관리 유관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반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학회·협회 등 학술단체와의 소통 확대, 공동 연구 및 연구 성과 공유
※ 학·협회 정기 간담회, 정책포럼 공동 개최 등
- 역사학, 행정학, 정보학 등 유관 분야 단체와의 교류 확대

5-5-3.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지원 [산업] [국]

□ 현황 및 필요성

- 새로운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리 기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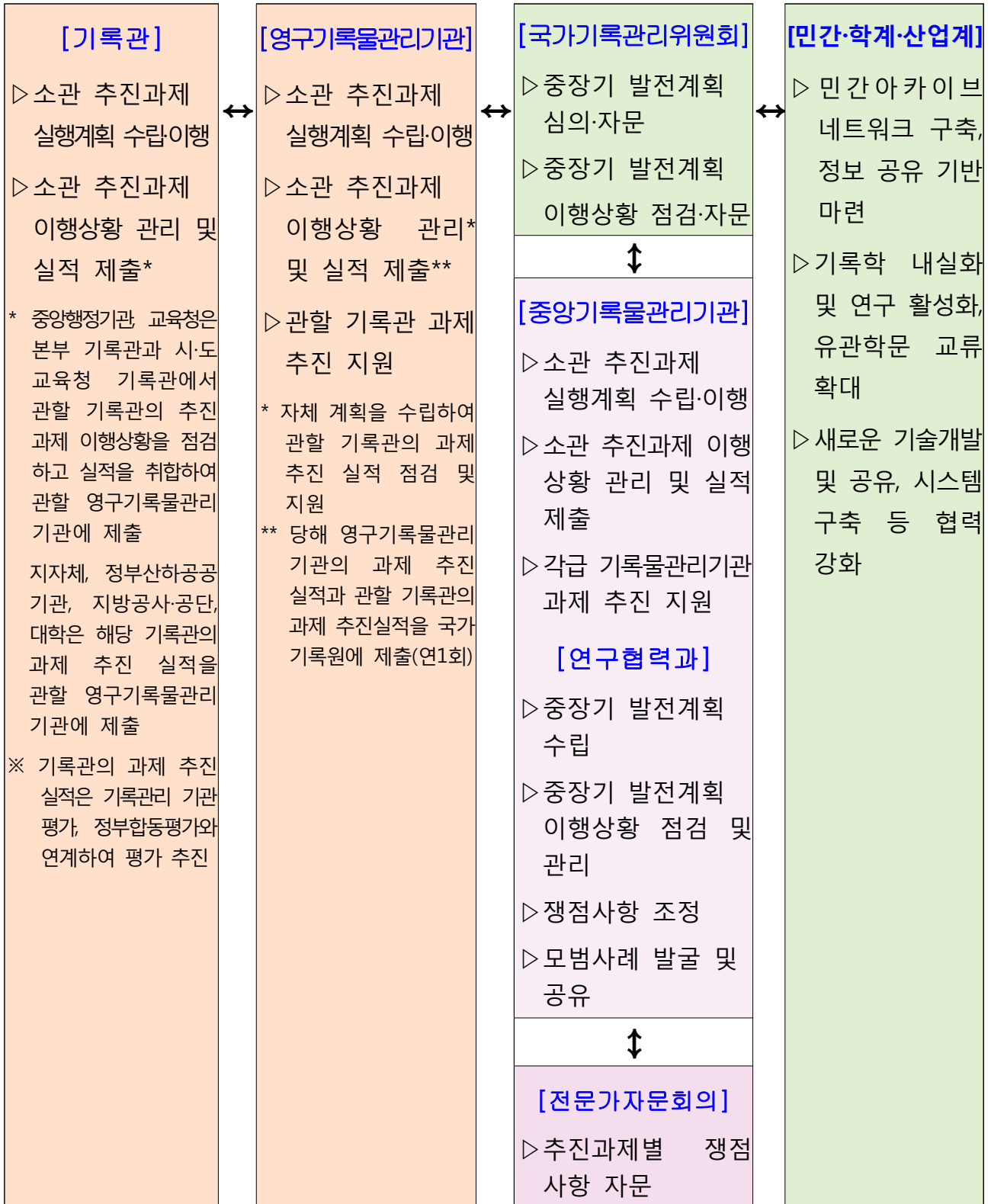
□ 추진내용

- 기록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강화

Ⅶ.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분야	기반구축 (2020년)	내실화 (2022년)	성과창출 (2024년)
기록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서비스정책 수립 및 모델 개발 ▶ 비공개상한제도 도입 등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문서비스, 연구·학술서비스 확대 ▶ 역사기록 전면 공개 등 공개접근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검색서비스 및 지능형 검색서비스 도입, 구축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특수유형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 생산시스템 기록 관리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 SNS 기록 관리체계 정립 ▶ 보존기간 준칙 개발 ▶ 기록화 관련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부존재 공익 침해심사제도 도입 ▶ 새로운 기록분류 체계 도입
기록관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기록관리 정책수립 역할정립 ▶ 아관보존공개재분류 업무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평가 및 실태 점검·컨설팅 강화 ▶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기록관리 책임 기관으로 역할 수행 ▶ 기록관리 인적기반 및 시설·장비 확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별 기록 관리 정책 수립 ▶ 아카이브 기능·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기록물 수집 정책 및 장기보존 체계 확립 ▶ 다양한 유형의 기록 통합이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 업무지식 자원화를 위한 영구기록관리 시스템 구현
기록관리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설치·운영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 ▶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별 조직 체계 구축 ▶ 기록관 조직체계 재정립 ▶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강화 및 역할 정립 ▶ 지방기록원 설치확대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3

과제별 추진주체

【1.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1-1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1-1	기록물관리기관별 서비스정책 수립 및 서비스모델 개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1-1-2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및 시행	국가기록원
1-1-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도 정비	국가기록원
1-2 기록정보 통합검색 및 접근 확대 기반 구축		
1-2-1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및 운영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1-2-2	기록물 원문서비스 지속적 확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3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1-3-1	기획재분류를 통한 시의성 있는 기록 공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3-2	연구·학술 등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강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3-3	다양한 기록콘텐츠 개발·서비스 확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3-4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아카이브 개방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4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1-4-1	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1-4-2	범국가적 기록연대·공유의 장 마련	기록물관리기관 민간·학계·산업계
1-4-3	국내외 관련기관과 기록문화 확산 협력사업 추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2.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2-1 기록화 대상 명확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2-1-1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국가기록원
2-1-2	기록의 정의 및 각급 기관별 기록화 대상 명확화	국가기록원 기록관
2-1-3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도입 및 운영	국가기록원
2-1-4	누락없는 기록화를 위한 제도 정비	국가기록원
2-2 기록분류·평가체계 정비 및 재설계		
2-2-1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도입 검토	국가기록원
2-2-2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2-2-3	보존기간 구분기준 및 보존기간 준칙·운영체계 마련	국가기록원
2-3 기록유형별 체계적 생산·관리 절차 재정립		
2-3-1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확립 및 단계적 확산	국가기록원 기록관
2-3-2	웹기록·SNS 등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2-3-3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등 특수유형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2-3-4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2-4 기록물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2-4-1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강화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2-4-2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생산-RM 기록물 이관기능 재설계	국가기록원
2-4-3	생산·활용을 고려한 기록유형별 메타데이터 재설계	국가기록원
2-5 처리과 기록관리 기능 및 책임 강화		
2-5-1	처리과 기록관리책임자 조정 및 제도화	국가기록원
2-5-2	기록물 정리 절차 및 방식 재정립	각급기관, 기록관 국가기록원
2-5-3	관리자·신규자 등 기록관리 교육과정 확대·강화	각급기관, 기록관 국가기록원

[3. 기록관 역할 강화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혁신]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3-1 기록관 권한 및 역할 확대		
3-1-1	기록관리 정책 수립·시행	기록관
3-1-2	기록관 역할 재정립 및 시행	기록관 국가기록원
3-2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3-2-1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활용 강화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2-2	기록물 관리·보존 및 이관 프로세스 정립	기록관 국가기록원
3-2-3	기록물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개선	기록관 국가기록원
3-3 기록관의 인프라 구축		
3-3-1	기록관리 인적 기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국가기록원 기록관
3-3-2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확충	기록관
3-3-3	기록관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국가기록원 기록관
3-4 기록관리 상시 모니터링 기능 정립		
3-4-1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통한 기록관리 수준 제고	국가기록원 기록관
3-4-2	기록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강화	국가기록원 기록관
3-4-3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체계 확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체성 확립 및 균형발전]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4-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정립 및 독립성 강화		
4-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1-2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 재정립	국가기록원
4-1-3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업무 기능 강화	헌법기록물관리기관
4-1-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운영 안정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4-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관리체계 확립		
4-2-1	기록물 수집정책 재정립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2-2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2-3	다양한 유형의 기록 통합 이관 및 관리체계 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3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4-3-1	기록물 안정적 보존기반 구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3-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확립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4 업무지식 자원화를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현		
4-4-1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	국가기록원
4-4-2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및 구축	국가기록원
4-4-3	지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기록물관리기관

【5. 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5-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5-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
5-1-2	기록물관리기관 네트워크 다각화 및 협력 강화	국가기록원
5-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강화 및 역할 재정립		
5-2-1	국가기록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독립성 확보	국가기록원
5-2-2	국가기록관리 정책 개발 등 핵심 기능 및 역할 강화	국가기록원
5-2-3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강화	국가기록원
5-3 국가기록관리체계 재정립 및 기반 확대		
5-3-1	기록관 조직체계 재정립	기록관
5-3-2	기록관 설치·운영 유형별 표준모델 마련	국가기록원 기록관
5-3-3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체계 구축	국가기록원 공공기관·대학
5-3-4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조직체계 구축	헌법기록물관리기관
5-3-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추진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5-4 기록관리 인력의 전문성·윤리성 강화		
5-4-1	기록학 및 유관 학문의 내실화 도모	학계 국가기록원
5-4-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국가기록원 학계
5-4-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문성 및 직무윤리 강화	국가기록원
5-5 민간·학계·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5-5-1	민간 아카이브 지원·협력체계 구축	민간아카이브 국가기록원
5-5-2	기록관리 학술단체 교류·협력 확대	학술단체 국가기록원
5-5-3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지원	산업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 및 과제별 실행방안 수립

- 중장기 발전계획(안) 각급기관·학계 등 공유 및 보완('20.1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등 최종안 확정('20.2월)
 - 추진배경·목적, 현황 분석, 비전과 핵심전략,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일정 등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별 실행방안 수립('20.3월)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업무계획에 반영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매년말)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과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별 TF 또는 실무회의, 연구용역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매년 추진계획 수립
 - * '20년도 예산은 자체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재조정, '21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추진과제별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연간, 수시)

- 중장기 추진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성과 지표에 따른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간 또는 수시 추진상황 점검
 - 국가기록원(연구협력과)에서 추진 실적 취합·정리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소관 과제 및 관할 기록관의 실행 계획·실적 취합 후 보고
-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의 환류체계 마련
 - 국가기록원에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포상·기록관리 기관평가 연계 검토
 - 기록관리 혁신 게시판 상시 활용, 연말 '연찬회' 등을 통한 공유·확산

구분	연도	내용
국가기록관리 혁신로드맵	2005 ~ 2008	<p>(비전) 참여민주주의 시대 기록문화 정착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과 책임의 동시 구현 - 국가기록관리를 위한 혁신동력 확보 - 시스템 혁신을 통한 지식정보화 달성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p>(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정책목표*, 9개 아젠다, 26개 혁신과제 <p>*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p>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2009 ~ 2013	<p>(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기록관리 실현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 있는 기록관리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 국가기록관리 기반강화로 선진인프라 확충 -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 우리 기록문화의 글로벌 국가브랜드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p>(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철저 관리, 안전한 보존, 전문인력, 산·관·학 협력, 기록의 지식자원화, 통합서비스, 기록문화 세계적 전파 등
국가기록관리 중장기업무계획	2013 ~ 2017	<p>(비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가기록관리 실현 (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3.0 등 변화에 적극 대응 : 개방·공유 등 국정방향과 연계 - 전자기록관리 실질적 정착 : '15년 전자기록물 이관대비 단계적 준비 - 핵심기록물의 철저한 생산 : 대통령기록물 등 주요기록의 체계적 관리 -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제공 : 이용자 유형별 기록서비스 마련 <p>(3대 목표, 10개 분야, 65개 세부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의 공유·활용 및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인프라 강화,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문화 확산
국가기록관리 혁신	2018 ~ 2020	<p>(공공기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분야*, 24개 혁신과제, 58개 세부과제 <p>*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p> <p>(대통령기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분야*, 9개 혁신과제, 13개 세부과제 <p>* 생산·이관·수집, 등록·재분류·지정, 보존·복원·시스템, 서비스·전시·교육</p>

<생산>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	회의록 보호조치 강화, 속기록 지정 확대		기록물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생산의무 등 개정, 정의, 등록·기록관리 대상 기준 마련)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행정DB 등 관리체계 정립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제도개선
BRM 기반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기록물 분류 및 평가체계 확립(중앙, 지자체, 교육청 보존기간 준칙 작성)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사업·사안별 분류체계, 생산시스템 기록관리기능 강화)	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분류 체계 및 기준표 재설계, 보존기간 책정 준칙 마련,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수립)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확산			
		대규모 정부투자사업 기록물 통합관리 및 준영구 이상 보존(정책실명제 시행 및 점검)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통보대상 및 방식 검토, 시스템개선, 비밀기록물)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 (제도 도입 및 운영)
			기록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도입

<RM · AM>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미이관기록물 DB구축, 이관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국가 주요 기록물의 지속적 수집·관리(중요 기록·특수유형·지자체 선별수집, 폐지기관 이관, 미이관 기록물 선별 수집 등)	
		미이관 경제부처 기록물의 누락없는 수집·관리	
		국가기록물의 누락없는 정리·등록으로 공공정보 공개 기반 마련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추진)	
기획수집(특정 사안별 네트워크 구축, 구술, 해외 및 민간소재 기록물)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 구축 (직접관리기관 확대 등)	공공기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체계 강화 (지원, 전문요원 배치, 기획수집, 소재정보 서비스)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제도정비, 경영평가 확대, 지원 체계 마련, 협업체계 강화)
		대학 기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 확대(협업체계, 컨설팅, 분류체계 정비, RMS, 평가)	
전자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전자기록 보존전략(장기보존포맷 변환 매체수록 관리) 및 재해복구체계 마련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포맷정책 재설계
	신뢰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보존포맷, 장기검증관리체계)		
		민관 협업 기반 디지털포맷 기술정보은행 구축(기반구축 및 확충, 외부개방)	연구개발 활성화(기술정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확립 : 전자화, 보존매체 수록			기록물 매체수록 전략 수립 (기준, 중장기 전략, 디지털화)
	구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현황 조사 및 구 전자문서 이관		
	필수기록물(Vital Records) 관리체계 구축		
비밀기록물 이관·관리		특수기록관 주요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수집·관리 강화(매년 15,000권)	

<활용>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증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 공개(공공기록법에 별도 규정 마련)
5년주기 재분류, 30년경과 공개원칙	주기적 공개재분류 체계화	비공개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재분류(20년경과 및 5년주기 공개재분류)	비공개기록물 재분류제도 개선(6호 비공개 재분류 유예)
	비공개 상한기간 마련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시기 단축(20년) 및 상한기간 설정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20년경과 공개원칙 도입 검토, 상한제도 도입)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다원적 검색체계, 계층기술, 각급기관 DB연계)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기록정보 활용 분야 확대	「기록콘텐츠 기획·설계 자문단」운영 정부기능 및 주요 국정과제별 기록콘텐츠 개발 다양한 커뮤니티 등 세분화된 이용자 그룹의 관심분야 지원(콘텐츠 보완 및 신규개발)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원문 온라인서비스, 학술연구 지원, 수요자 중심 서비스)	디지털기록의 통합관리체계 구현(비전자 디지털화 100%, 디지털기록 정보센터 운영)	원문정보 서비스 비율 대폭 확대(디지털화 55%→70%, 원문서비스 4%→20%) 학술연구자를 위한 현장방문연구 여건 마련(인프라, 맞춤형 서비스, 검색도구 지원, 홍보)	공공누리 적용 및 철건목록 개인 정보보호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체계(프로세스 개선, IPTV 기반의 동영상 기록정보서비스)	정부 간행물을 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제공(원문서비스, 콘텐츠 구축) 국민의 열람 빈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한 신속 서비스 실시 : 3일	
기록정보의 통합활용체계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각급기관 주요 기록물 통합을 통한 정보자원 그린화 (기록정보 통합 활용, 검색)	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 기록물 공동 활용 체계 구축(국가기록포털과 부처·지자체 RMS간 통합검색)	
		기록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One-stop 서비스 구현(검색기능 고도화, 국가기록포털 사이트와 각급기관 RMS간 연계 확대)	
	기록물 기술(記述) 강화를 통한 기록 정보 지식자원화	이용자 맞춤형 기록물 기술 강화(해외수집, 민간기록물 기술) 쉽고 편리한 기록물 검색 기반 환경 조성(건상세기술, 변천연혁, 기록물 검색어사전 구축)	기록물 정리·기술모델 재설계
	국가기록물 고유 식별체계(UCI) 도입·확대		
		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추진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공감형 프로그램 개발·추진 찾아가고 싶은 기록문화 실록테마파크 조성	

<대통령기록관리>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대통령기록법 제정, 기록관 설치		대통령기록관 기능 및 위상 재정립 ('15년 개관)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대통령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생산기관 컨설팅, 생산시스템 구축, 역대기록 수집)	대통령기록물의 상시적·체계적 관리 강화(생산기관 지원, 교육, SNS, E-mail 수집방안, 이관)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구술공개, 행정박물 폐기, 지정기록물 열람)	- 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대통령구술기록 수집 내실화 및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구술아카이브 구축)	수집기록(구술·기증 등)물 관리 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관리체계 확립(차세대 보안·보존시스템)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존·복원 체계 강화(보존·복원 인프라 구축)	- 전자매체 관리기준 및 보존 절차 마련 - 보존공간 정비 등 보존환경 개선
		대통령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강화 및 고도화(영구보존포맷 변환 100%, 전자서명검증 50%, RFID 90%)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
	국내외 대통령기록 소장·수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	민간과의 대통령기록물 연구협력 확대(민간 기관과 MOU, 연구지원센터 기반 협력추진) 국내·외 민간 소장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확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분류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 분류·정리·기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검색 도구 개발(전거레코드 및 시소러스 구축사업 추진)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 검색서비스 및 통시대적 정리 추진(주제분류체계, 정책자료집)	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대통령기록전시관(세종시) 구축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대통령기록물 전문연구자 지원 강화(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사업)	대통령기록연구 지원 확대

<민간·해외기록 수집 및 협력체계 구축>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민간기록물 관리체계(현황조사, 협력 체계, 관리방안 마련, 국가기록물지정 제도)	민간아카이브 활성화(기록사랑마을, 내 고장 역사찾기, S/W 보급)	민간기록물의 적극적 수집 (전시실, 포털 구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확대 및 보존관리 강화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통한 지역사회 기록 문화 공유·확산	
	산·관·학 협력을 통한 친환경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기록보존기술 산업화로 신시장·일자리 창출 (보고서, 발표, 특허, 국산화)	
		민간소재 국가 중요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실시	
		방송사와 공동으로 국민공지·화합을 유도 하는 프로그램 개발	
해외기록물 수집	해외 한인 기록유산의 종합 수집·활용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확대 및 활용 체계 구축(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수집)	
		재외동포기록 기획 수집 및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재외동포기록센터 구축, 10만매 수집)	
기록관리 국제협력	외국과의 기록관리분야 협력 내실화 (MOU) / 기록관리 국제 교류협력 강화	국제 교류협력 증진(국제회의 참석, MOU)	
		글로벌 기록관리교육 운영(국제기록문화 유산과정)	
	기록문화의 국가브랜드화 추진으로 녹색 성장기반 조성(국제기록엑스포 개최)	2016년 ICA 서울총회 개최 준비	
	세계 각국에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 적극 홍보(외국어 동영상, 기록문화 유산 지도, 간행물 배포)		
	남북 기록물관리기관간 교류협력 추진		

<조직 · 지원>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역할·위상 재정립, 협력·지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및 예산지원근거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민간기록물 수집권한 부여) 및 설치 촉진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록관 기능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 기준 정비
		각급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업·소통 체계 강화(표준화 작업반, 연찬회)	
		기록관리 평가 내실화 (포상, 협의회, 컨설팅)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 개선
		기록물관리기관 보존시설·환경관리 맞춤형 컨설팅	
	처리과 기록관리체계 확립(기록관리 책임관, 담당관 등 직위별 역할분담), 신규자 교육		

<전문인력 · 기록문화>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전문인력 수급계획, 전문인사관리 제도, 대학교육과정 인증제도, 교육 강화)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인턴과정, 협동교육과정, 교육 확대, 인사교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체계적 관리 (자격증 발급, 채용지원, 인사교류-매년 4명)	기록관리 전문직 연구 활동 및 인사교류촉진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원		기록관리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기록관리교육 확산을 위한 협업·소통 체계 강화	
기록관리 의식개혁, 윤리강령, 대국민 홍보강화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록문화교육 추진	

<시스템>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시청각기록물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비표준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웹기록물 아카 이빙 시스템 구축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수집 관리시스템 고도화, 이관모델 재설계, RMS 기능개선)
생산기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표준 RMS	표준 RMS 확산(대학, 공공기관 포함)	전자기록의 안전한 생산·보존·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RMS 보급완료, 이관 기능 고도화)	
영구보존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표준 AMS 확산(16개 광역시도)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정책마련, 데이터품질관리체계 구축)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전자기록물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통신망 이중화, 망분리 등)	

<시설·장비>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국가기록원 서고간 역할분담체계 구축			
서고신축, 중간관리시설 설치, 서고 리모델링, 장비 확충 등	중간기록관리시설 건립	보존서고 인프라 확충 및 시설·환경 강화(국가중요기록물 보존서고, 실록 서고 개선)	
	각급기관의 기록물 RFID 인프라 구축	기록물 보안 및 관리체계 강화(RFID 확대)	

<표준화>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기록관리 표준 고도화 및 확산(표준 이행 인증체계 구축 포함)	전자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현장 활용성 확대	